

## 2024학년도 10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 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

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2

제 [ ] 선택

1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회사에서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싼 의견 대립을 해결하고자 근로자와 경영진 간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A는 정치로 보지만 B는 정치로 보지 않습니다. A는 모든 사회 집단이 다양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정치로 보고, B는 정치권력을 획득·유지·행사하는 국가 고유의 활동만을 정치로 보기 때문입니다.



- ① A는 소수 통치 엘리트의 활동만을 정치로 본다.
- ② A는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 ③ B는 국가 형성 이전에 나타나는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 ④ B는 다른 사회 집단의 활동과 구별되는 국가 활동의 특수성을 부정 한다.
- ⑤ A, B 모두 학교 구성원이 모여 학생 자치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정치로 본다.

2. 법치주의의 유형 A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는 국가 권력 작용의 근거를 법률로써 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할 것을 강조한다. 이는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A는 이미 법률이 제정되어 많은 시민이 그 법률을 준수하고 있더라도 그 법률이 헌법 이념에 합치되지 않는다면 이에 따른 국가 권리 행사는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보기>

- ㄱ. 통치의 형식적 합법성을 간과한다.
- ㄴ. 실현 방안으로는 위헌 법률 심사제가 있다.
- ㄷ. 국가 권리의 자의적 행사 가능성을 경계한다.
- ㄹ. 합법이라는 명분으로 독재 정치를 정당화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3. 우리나라 헌법 기관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는 재정에 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한 기관이 아닌 여러 기관에 걸쳐 예산 절차가 진행되도록 한다. 예산안 편성은 정부의 권한이지만 예산안은 A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정부의 예산 집행이 끝나면 B가 의장이 되는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에서 국가 결산 보고서를 심의한다. 이후 B 소속의 헌법 기관 C가 국가 결산 보고서를 토대로 결산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B와 차년도 A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① A는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를 담당한다.
- ② C는 국정 감사 및 조사권을 가진다.
- ③ A와 달리 C는 국민의 선거로 구성된다.
- ④ B는 A가 비준한 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⑤ C의 장(長)은 A의 동의를 얻어 B가 임명한다.

4.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교사: ○○ 신문에는 A 실현 방안의 사례, △△ 신문에는 B 실현 방안의 사례가 나타나 있습니다.

○○ 신문

보건복지부는 노인 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해 안정된 노후를 위한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 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의 무형유산, 유형 문화유산 등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청년 전통문화 기획자를 양성하기로 하였다.

- ① A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된 원리이다.
- ② A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③ A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 규제 및 조정 정책의 근거가 된다.
- ④ B는 남북 분단의 상황을 반영한 우리나라 헌법 특유의 원리이다.
- ⑤ B는 여성 및 연소자의 근로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하는 근거가 된다.

5.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친구 을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한다는 유언을 남겼다. 갑이 사망한 이후, 갑의 형제자매는 증여로 인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을은 1심 계속 중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하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A에 (가) 제청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A가 이를 기각하자 을은 B에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나) 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B는 상속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 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히며 민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 ① A는 민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② B는 대통령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 소송을 관할한다.
- ③ B의 재판관 중 3인은 A의 장(長)이 임명한다.
- ④ (나)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 ⑤ A는 직권으로 B에 (가)를 제청할 수 있다.

## 2 (정치와 법)

# 사회탐구 영역

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임.) [3점]

A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평균 재임 기간이 점차 짧아지고,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조기 총선을 치르는 일이 반복되었다. 이에 A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안정된 국정 운영을 위한 대안으로 B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갑국의 정치학자들은 B를 도입하면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히 보장될 수 있지만,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의회 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 (가)로 인해 또 다른 정치적 대립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 ① A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 ② B에서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A와 달리 B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이다.
- ④ B와 달리 A에서는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동일인이다.
- ⑤ (가)에는 '연립 내각 구성'이 들어갈 수 있다.

7.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거리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정당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졌다. 또한 환경 보호 단체는 현수막 제작 및 폐기 과정에서 다량의 탄소가 배출되어 환경 오염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 정당 소속 의원이 정당별 현수막의 설치 개수와 장소를 제한하는 ㉣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이후 ㉓ 의회는 ㉔ ㉤ 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보기>

- ㄱ. ㉠은 정보 제공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 ㄴ. ㉡은 정치 과정에서 산출에 해당한다.
- ㄷ. ㉢과 달리 ㉓은 정치 과정에서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한다.
- ㄹ. ㉔은 정치 과정에서 투입에 해당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이 운영하는 영상 제작업체의 소속 직원 을은 고객 병이 갑에게 의뢰한 돌잔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행인 정이 크게 다쳤고, 을은 행사장에 제때 도착하지 못해 돌잔치 영상을 촬영하지 못하였다.  
○A가 출장 간 친구의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이웃 주민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 반려견이 행인 B를 공격하여 상처를 입혔다. 한편 B의 자녀 C는 골목에서 공을 던지며 놀다가 주차되어 있던 D의 자동차 창문을 깨뜨렸다.

- ① 정은 갑과 을에게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② 갑이 을에 대한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갑은 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을이 정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 갑은 정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④ A는 반려견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B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⑤ C에게 책임 능력이 있는 경우 B는 D에게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9 ~ 10]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국의 의회 의원 정수(定數)는 16명이며, 이 중 지역구 의원은 6명, 비례 대표 의원은 10명이다. t대 의회 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에 1표를 행사하였고, 비례 대표 의석은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하여 정당별로 배분되었다. t대 지역구 의원은 선거구마다 득표순으로 2명이 당선되었다. 표는 t대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t대 의회 의원 선거 결과>

구분	A당	B당	C당	D당	무소속
지역구 의석수	1석	1석	1석	2석	1석
비례 대표 의석수	3석	0석	3석	4석	

t대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의 투표 행위로써 비례 대표 의원의 선출을 직접 ·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없어 (가)에 위배되고,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그 무소속 후보자의 선출에만 기여할 뿐 비례 대표 의원 선출에는 기여하지 못하므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하여 (나)에 위배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t+1대 의회 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에 1표,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 정당에 1표를 행사하고 비례 대표 의석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각 정당에 배분하였다. t+1대 의회 의원 선거에서 의원 정수(定數)를 t대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를 6개로 재획정하여 선거구별 최다 득표자 1명이 당선되는 대표 결정 방식을 채택하였다. 표는 t+1대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t+1대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

구분	A당	B당	C당	D당	무소속	합계
선거구 1	20표	0표	10표	30표	40표	100표
선거구 2	30표	10표	20표	40표	0표	100표
선거구 3	30표	20표	0표	40표	10표	100표
선거구 4	0표	20표	30표	40표	10표	100표
선거구 5	20표	10표	30표	40표	0표	100표
선거구 6	20표	10표	0표	40표	30표	100표

<t+1대 비례 대표 의원 선거 결과>

구분	A당	B당	C당	D당	합계
득표율	20%	10%	30%	40%	100%

\* 정당은 A ~ D당만 존재하며,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1명의 후보자만 공천함.

\*\* 선거구별로 무소속 후보자는 1명이며, 투표율은 100%이고, 무효표는 없음.

9. 민주 선거의 원칙 (가), (나)에 위배된 사례로 옳은 것은?

- ① (가) – 도난 방지를 위하여 기표소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 ② (가) –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③ (나) – 유권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투표한 경우
- ④ (나) – 유권자의 투표수에 차등을 두는 경우
- ⑤ (나) –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하여 외부에 공개한 경우

10. 위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대로 고른 것은?

[3점]

<보기>

- ㄱ.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t대, t+1대 모두 단순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였다.
- ㄴ.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t대는 소선거구제, t+1대는 중 · 대 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
- ㄷ. t+1대에는 전체 의석 중 과반을 확보한 정당이 존재한다.
- ㄹ. t대, t+1대 모두 비례 대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이 존재한다.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 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3

## 11. 민법의 기본 원칙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진행자: 갑은 ○○ 회사가 제조한 텔레비전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회사의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 네,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 회사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가 지는 손해 배상 책임에는 A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 회사는 화재가 텔레비전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① 경제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강자의 부당한 대우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②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된 약관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가 된다.
- ③ 개인은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사용·수익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④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는 원칙이다.
- ⑤ 개인의 사유 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가 인정되어 국가나 다른 개인이 이를 침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 12.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은 자신의 반려견이 수의사 을의 진료 행위로 실명 위기를 겪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정보 통신망에 을의 이름 및 진료 행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인해 그러한 내용을 작성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음을 알게 되자, 갑은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명예 훼손 행위를 상당히 억제할 것이기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으며 명예 훼손 행위에 대한 실효적 구제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조항을 대체하면서도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 훼손 행위가 무분별하게 허용된다면 개인의 명예와 인격은 제대로 보호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해당 조항이 법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보아 갑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보기>

- ㄱ. 갑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 ㄴ. 헌법 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명예 훼손 행위를 억제하는 데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 ㄷ. 헌법 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피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 ㄹ. 헌법 재판소는 해당 조항을 통해 보호하려는 개인의 명예와 인격보다 제한되는 표현의 자유가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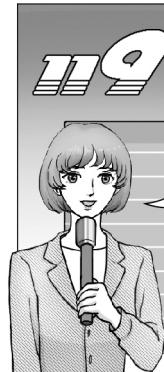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13. 정치 참여 집단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임.) [3점]

최근 산업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A는 이번 총선에서 산업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노동자 인권 보호라는 공익 추구를 위해 조직된 B는 산업 안전 의식을 제고하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한편 안전 설비 업계 종사자들의 특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결성된 C는 산업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① A는 의회와 행정부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 ② B는 자신의 활동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진다.
- ③ C는 비영리성을 바탕으로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한다.
- ④ A와 달리 B는 공직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한다.
- ⑤ C와 달리 A는 정치적 중립을 추구한다.

## 14.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지방 의회 중 하나임.)



A는 오늘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 설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해당 조례로 인해 화재 시 피해 규모가 크고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공장 지대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를 총괄하는 B는 빠른 시일 내에 조례의 범위 안에서 지원 대상 및 절차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고 소방 설비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① A는 지방 자치 단체의 집행 기관이다.
- ② A는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사무를 감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 ③ B는 주민 소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B는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 ⑤ A, B 모두 중앙 정부와 수평적 권리 분립 관계에 있다.

## 1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사회자: 입양 보냈던 자녀 A와 다시 만나게 되셨는데 그동안의 사연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갑: 저는 을과의 사이에서 A를 낳고 얼마 뒤 이혼하였습니다. 당시 저와 을 모두 A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A는 병과 정 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무를 만나 결혼식은 올리지 못하였지만 혼인 신고를 하고 가정을 이루어 무와의 사이에서 B를 낳았습니다. B를 키우며 A가 내내 그리웠고 용기를 내서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만나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보기>

- ㄱ. A가 입양됨에 따라 갑과 A의 친족 관계는 종료된다.
- ㄴ. B는 갑과 무의 '혼인 외의 출생자'이다.
- ㄷ. A가 입양된 이후 을이 유언 없이 사망한다면, A는 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 ㄹ. A가 입양된 이후 병이 유언 없이 사망한다면, 정과 A는 모두 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4 (정치와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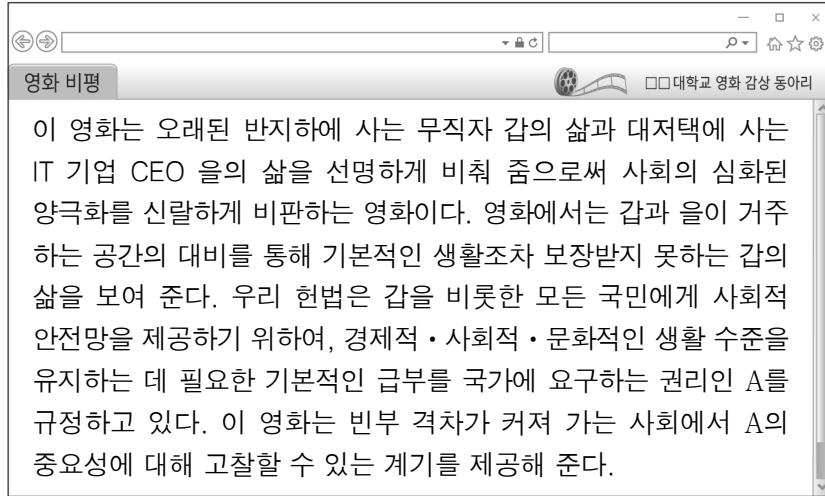
# 사회탐구 영역

16. 밑줄 친 ‘A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별도 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갑은 타인 간의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와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청취’는 타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고, 종료된 대화의 녹음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대법원은 갑의 행위를 ‘청취’로 보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 법정주의의 A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① 형별 법규의 소급 입법 및 소급 적용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 ②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③ 범죄와 형벌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④ 범죄와 형벌은 의회가 제정한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⑤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17. 기본권 유형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능동적 권리이다.
- ②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해 등장한 현대적 권리이다.
- ③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이다.
- ④ 기본권 침해 시 이를 구제받기 위한 절차적 권리이다.
- ⑤ 헌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이다.

18.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과 을은 혼인 신고를 한 후 자녀 병을 낳고 결혼 생활을 지속하던 중 을의 부정한 행위를 사유로 재판을 통해 이혼하였다. 갑은 을과의 협의를 통해 병(12세)에 대한 양육권을 갖기로 하고 병을 흘로 양육하였다.

- <보기>
- ㄱ. 갑과 을의 이혼은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 ㄴ. 갑과 을의 이혼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 ㄷ. 갑, 을 모두 이혼 시 혼인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ㄹ. 갑과 을의 이혼 시 을의 병에 대한 면접 교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9. (가) ~ (다)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17세)은 을(35세)이 운영하는 약기 매장에 방문하여 고가의 드럼을 매매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갑의 법정 대리인은 병이다. 표는 질문에 따라 계약 당시 상황을 (가) ~ (다)로 구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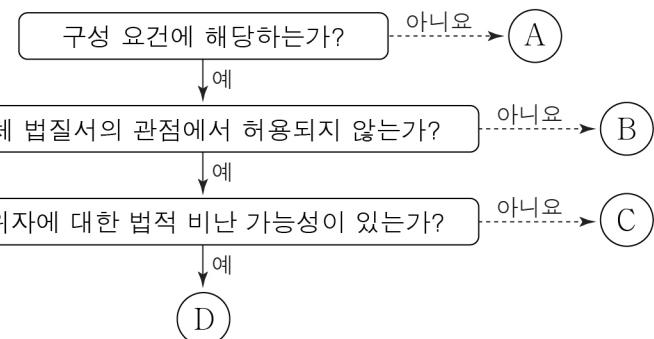
질문 상황	병의 동의가 있었는가?	을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는가?
(가)	예	예
(나)	아니요	예
(다)	아니요	아니요

- <보기>
- ㄱ. (가)에서 병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ㄴ. (나)에서 갑은 병의 동의가 있어야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ㄷ. (나)에서 을은 병에게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 ㄹ. (다)에서 을은 병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0. A ~ D에 해당하는 사례로 옳은 것은? [3점]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우선 법률에 규정된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 위배되어 위법성이 인정되며, 그 행위자를 비난 할 수 있을 정도로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어야 한다. 이를 범죄의 3단계 성립 요건이라고 하며,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림은 범죄 성립 여부의 판단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 ① A - 도서관에서 타인의 노트북을 훔친 갑(12세)의 행위
- ② B - 심신 상실 상태에서 행인을 때려 다치게 한 을(35세)의 행위
- ③ B - 친구의 동의하에 그 친구 아버지 소유의 지갑을 훔쳐 처분한 병(18세)의 행위
- ④ C - 딸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회사 기밀을 훔쳐 유출한 정(41세)의 행위
- ⑤ D -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맹견을 피하려고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있던 가게 유리창을 파손한 무(26세)의 행위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